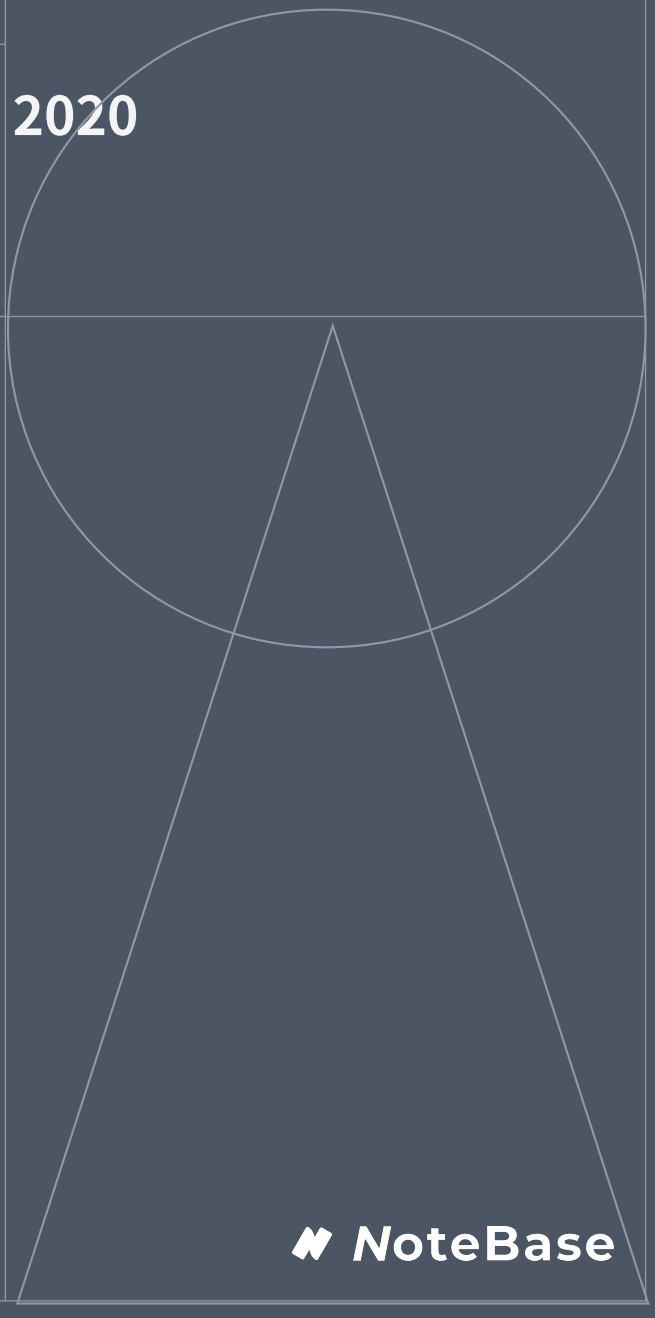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0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0

1. 다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 국회의원 선거는 (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 의원 246명을 선출하고, (나) 비례대표제를 보충하여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배분하고 있다.

① (가)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② (나)는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③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와 (나)가 적용되고 있다.
④ (가)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나)는 정당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특징 및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적용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선거구가 작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 수 있지만, 당선자 외 후보에게 던진 표가 사표가 되기 쉽다.
(나)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소수 의견의 대표 가능성을 높이고 다당제 형성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의 범위가 비교적 작으므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다.
② O —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소수 정당도 득표에 상응하는 의석을 얻기 쉬워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③ X — 틀린 부분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와 (나)가 적용된다'는 표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올바르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적용되고,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이다.
④ O —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선거구의 1위 후보만 당선되므로 낙선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⑤ O —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다당제를 촉진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가 모두 같은 지역구 선거 제도를 사용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비례대표제는 세 선거에 모두 결합되지만, 지역구 선출 방식은 국회의원·광역의원이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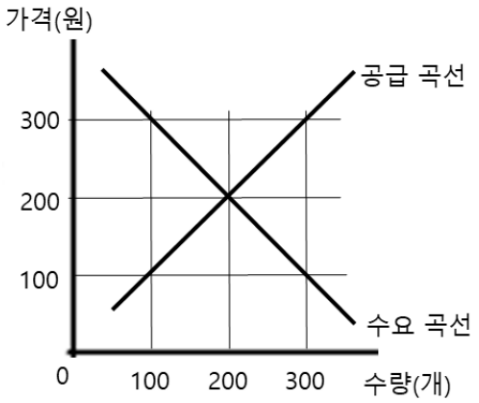
먼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구별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가'로 비례대표제를 구별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는 국회의원·광역의원은 1명, 기초의원은 여러 명을 선출한다.

암기 포인트

지역구는 국회·광역 '소', 기초 '중',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NoteBase

2. 다음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X재 가격 결정 원리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X재 시장의 판매 수입은 2만 원이다.
② X재 가격이 300원일 때 거래량도 300개로 증가한다.
③ X재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④ X재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⑤ X재의 최고 가격을 100원으로 통제하면 초과 수요량이 300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읽고, 가격 변화와 곡선 이동이 거래량·초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가격(원), 가로축은 수량(개)임을 확인한다.
2.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균형 가격 200원과 균형 거래량 200개를 읽는다.
3. 특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읽고, 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한다.

핵심 근거

그래프의 교점은 가격 200원, 수량 200개이다. 가격이 300원이면 수요량은 100개이고 공급량은 300개이며, 가격을 100원으로 통제하면 수요량은 300개이고 공급량은 100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근거 위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은 가격 200원, 거래량 200개이다. 판매 수입은 200원 × 200개 = 40,000원이므로 '2만 원'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현재 판매 수입은 4만 원이다.
② X — 근거 위치: 가격 300원의 가로선에서 수요량은 100개, 공급량은 300개이다. 실제 거래량은 더 적은 수요량에 의해 100개가 되므로 '거래량도 300개로 증가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공급량은 300개이지만 거래량은 100개이다.
③ X —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모두 균형 거래량을 늘리지만, 수요 증가는 가격을 올리는 방향이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리는 방향이므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가격도 상승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두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락·불변 중 하나가 된다.
④ O — X재의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하는 비용이 커져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X재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⑤ X — 근거 위치: 가격 100원의 가로선에서 수요량은 300개, 공급량은 100개이다.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200개이므로 '300개'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최고 가격을 100원으로 통제하면 초과 수요량은 200개이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공급량 300개를 실제 거래량으로 착각하기 쉽고, ⑤에서는 수요량 300개를 초과 수요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 중 작은 값이며,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교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확인한다. 가격이 따로 주어지면 그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읽어 실제 거래량은 둘 중 작은 값,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로 판단한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할 때에는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 변화는 이동 폭을 비교해야 결정된다.

암기 포인트

균형은 교점, 거래량은 짧은 쪽, 초과 수요는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값이다. 보완재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요 감소이다.

NoteBase

3. 다음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떤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제품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주변 농가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①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
②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③ 경제적 순손실(자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④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⑤ 제품 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산 과정의 오염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시장 생산량, 사회적 비용, 경제적 순손실, 외부 불경제 및 교정세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자의 행위가 제3자에게 보상 없는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이때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 외부비용을 더한 것이므로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시장은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며, 그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가 틀린 표현이다.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장은 생산비용을 실제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인식하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이다.
② O — 사회적 비용에는 공장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뿐 아니라 주변 농가가 입는 외부비용도 포함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③ O —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초과하므로 추가 생산분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커지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O — 생산 활동이 제3자인 주변 농가에 보상 없는 피해를 주므로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즉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⑤ O — 제품 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공장이 인식하는 한계비용이 높아져 과다 생산과 오염이 감소한다. 특히 세금을 한계 외부비용만큼 부과하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접근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오염 때문에 생산이 위축될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공장이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그 외부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시장 생산량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다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자에게 보상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판단한다. 이어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 세금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시장 생산량은 너무 많다.

NoteBase

4.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13세인 갑과 16세인 을은 타인의 물건을 단순 절도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보 기>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다.
ㄴ. 을은 갑과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ㄷ. 을은 검사에 의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13세인 갑과 16세인 을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보호처분 = 소년의 교화와 보호를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으로, 형벌과는 다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가 소년에게 선도·상담·교육 등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핵심 구분

갑은 13세이므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기소될 수 없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을은 16세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소년이므로 기소될 수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는 을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의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은 보호처분이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을도 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른 표현: ㄱ, ㄷ

② O
- ㄱ은 13세인 갑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다는 설명이고, ㄷ은 16세인 을에게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둘 다 옳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16세인 을도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틀린 표현: ㄴ, ㄷ
- 올바른 표현: ㄱ, ㄷ

④ X
- ㄴ과 ㄹ은 모두 틀리다. 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은 소년원이 아니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의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된다.
- 틀린 표현: ㄴ, ㄹ
- 올바른 표현: ㄱ, ㄷ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고 징역형의 집행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진다.
- 틀린 표현: ㄷ, ㄹ
- 올바른 표현: ㄱ, ㄷ

오답 포인트

형사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호처분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ㄴ을 옳다고 오인하기 쉽다. 또한 소년원 송치라는 표현 때문에 소년에 대한 징역형도 소년원에서 집행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고 징역형 집행은 형사처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위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형사책임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형벌과 보호처분을 분리하고, 소년원은 보호처분의 집행 기관이며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14세 미만은 형벌 X·보호처분 O,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분 O·보호처분 O, 소년원은 보호처분·교도소는 징역형이다.

NoteBase

5. 다음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A)와 (B)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자본이라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자본을 가지지 못하고 임금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불균등한 부의 배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균등한 부의 배분이 세습을 통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이다.

(B)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균등한 배분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지나친 결과적 형평성의 강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약화시켜 사회 발전에 이롭지 않다.

<보 기>

ㄱ. (A)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ㄴ. (A)의 관점은 차등분배가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ㄷ. (A)의 관점은 (B)의 관점과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파악한다.

ㄹ. (B)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갈등론과 기능론의 차이를 파악하고, 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갈등론: 사회 불평등을 지배 집단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유지한 결과로 보며, 이러한 불평등이 계층을 고착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키워드는 자원 독점, 불평등한 분배, 계층 고착이다.
기능론: 사회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분배된 결과로 보며, 차등 보상이 성취동기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키워드는 기능적 중요도, 기여도, 차등 보상이다.
핵심 대비: 갈등론은 불평등을 집단 간 지배와 구조적 갈등의 결과로 보는 반면, 기능론은 역할의 중요도와 개인의 업적에 따른 불가피하고 기능적인 현상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A)는 사회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자본 소유 여부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ㄴ만 옳다. 틀린 표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자본 소유 여부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로부터 발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A)는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성취의 차이가 아니라 지배 집단의 자원 독점과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는다. 따라서 'ㄱ, ㄹ'이 아니라 ㄹ만 옳다. 틀린 ㄱ은 '(A)는 사회 불평등이 자본 소유 여부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은 옳고 ㄷ은 틀리다. (A)는 불평등한 분배가 계층을 고착시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지만, 사회 구조와 집단 간 관계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B)의 기능론도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따라서 틀린 표현 '(B)와 달리 미시적 관점'은 '(B)와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A)는 불평등한 분배가 계층을 고착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B)는 개인의 능력·노력·기여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조하므로, 가정 배경이나 세습적 지위 같은 귀속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X —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A)와 (B)는 모두 사회 구조 차원에서 불평등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ㄹ만 옳다. 틀린 ㄷ은 '(A)의 관점은 (B)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파악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능력과 노력'은 기능론의 핵심 표현인데 이를 (A)에 붙인 것이 함정이다. 또한 갈등론과 기능론은 결론은 반대이지만 둘 다 사회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므로, ㄷ의 '미시적 관점'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 소유, 자원 독점, 계층 고착, 불평등의 역기능이 나오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역할의 중요도, 기여도, 능력과 노력, 차등 보상의 필요성이 나오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두 관점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갈등론은 '독점·고착·저해', 기능론은 '기여·차등 보상·동기'이며, 둘 다 거시적 관점이다.

NoteBase

6. A~D는 각각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형태 / 질문	A	B	C	D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공급자가 1인인가?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상품이 동질적인가?	(가)	(나)	(다)	예

① A시장은 개별 기업의 시장 결정권이 전혀 없다.
② B시장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상태에서 이윤 극대 생산량을 결정한다.
③ D시장은 기업들 간의 담합 및 카르텔이 형성되기에 적합하다.
④ C시장의 가격은 D시장보다 낮고 공급량은 많다.
⑤ (가)와 (나)에는 '예', (다)에는 '아니오'가 들어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장 진입의 자유, 공급자 수, 상품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독점·과점·완전 경쟁·독점적 경쟁 시장을 구분하고 각 시장의 가격·생산 및 기업 행동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독점 시장이다. 진입 장벽이 있고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이다.
B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진입이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C는 과점 시장이다. 진입 장벽이 있고 소수 기업이 상호 의존적으로 경쟁하며, 상품은 동질적일 수도 차별화될 수도 있다.
D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진입이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여 개별 기업이 가격을 좌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는 아니오, (나)는 아니오이며, (다)는 과점 시장의 상품이 동질적일 수도 차별화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예나 아니오로 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독점 시장이므로 독점 기업은 가격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틀린 표현은 '시장 결정권이 전혀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개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이다.
② O — B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기업도 이윤을 극대화할 때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장기 균형에서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조건도 함께 성립한다.
③ X — D는 완전 경쟁 시장이므로 기업 수가 많고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작아 담합과 카르텔 형성에 적합하지 않다. 틀린 대상은 'D시장'이며, 올바르게는 '소수 기업이 상호 의존하는 C의 과점 시장이 담합과 카르텔 형성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④ X — C는 과점 시장이고 D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과점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이 높고 공급량이 적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틀린 표현은 '가격은 더 낮고 공급량은 많다'이며, 올바르게는 '가격은 더 높고 공급량은 적다'이다.
⑤ X — 독점 시장 A와 독점적 경쟁 시장 B를 동질적 상품 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와 (나)는 '아니오'이다. 또한 과점 시장 C에서는 동질재와 차별재가 모두 가능하므로 (다)를 반드시 '아니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대응 '(가)·(나)는 예, (다)는 아니오'는 '(가)·(나)는 아니오, (다)는 상품 차별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진입이 자유롭다'는 조건만으로 B와 D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두 시장 모두 진입은 자유롭지만 B는 상품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D는 상품이 동질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다. 또한 과점은 반드시 차별화 상품만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동질재와 차별재가 모두 가능한 시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급자가 하나이면 독점, 소수이면 과점으로 구분한다. 공급자가 다수이고 진입이 자유로우면 상품이 동질적일 때 완전 경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독점적 경쟁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독점·과점은 완전 경쟁보다 시장 지배력이 크다는 점을 선지에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하나=독점, 소수=과점, 다수·동질=완전 경쟁, 다수·차별=독점적 경쟁이다.

NoteBase

7. 법치주의의 유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 (나)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과 사법을 중시하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존엄성, 평등,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① (가)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② (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보다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나)는 (가)에 비해서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의 형식적 합법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각각 어떻게 중시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며,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국가 권력의 법률상 근거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와 권리 보장 등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는 합법성을, (나)는 합법성과 함께 통치의 정당성까지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법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를 중시하고 그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으므로, 통치의 정당성보다 형식적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이다.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나)인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통치를 중시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는 (나)보다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다.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통제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인 (나)에서 더 강조된다. 올바르게는 '(나)는 (가)보다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나)는 (가)에 비해서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이다.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 (가)가 악법에 따른 독재를 합법적인 통치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더 크다. 올바르게는 '(가)는 (나)에 비해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가)는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이다. (가)와 (나)는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올바르게는 '(가)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중시하고, (나)는 이에 더하여 법률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법률의 지배를 강조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두 유형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③은 위헌 법률 심사가 '법률에 따른 심사'라는 점만 보고 (가)와 연결하게 만들지만, 그 제도는 법률의 내용까지 헌법에 비추어 통제하므로 (나)와 더 밀접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적법한 제정 절차와 법률상 근거만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정의, 위헌 법률 심사처럼 법률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의로운 법에 의한 통치'이다.

NoteBase

8. 다음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옳은 것은?

>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① 중앙은행 – 국공채 매각
② 중앙은행 – 재할인율 인상
③ 중앙은행 –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④ 정부 – 세금 인상
⑤ 정부 – 정부지출 증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염병 확산으로 소득·소비·생산이 감소한 경기 침체 상황에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었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총수요가 부족한 경기 침체 상황이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 개념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확장적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적용 기준

경기 침체에는 정부 지출 증가·세금 인하 또는 국공채 매입·재할인율 인하·법정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확장 정책을 적용한다. 반대로 정부 지출 감소·세금 인상 또는 국공채 매각·재할인율 인상·법정 지급준비율 인상은 경기를 진정시키는 긴축 정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 올바르게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② X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금융 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부담을 높여 대출과 통화 공급을 줄이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 올바르게는 재할인율을 인하해야 한다.
③ X — 중앙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은 금융 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이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 올바르게는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해야 한다.
④ X — 정부의 '세금 인상'은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과 소비를 줄이는 긴축적 재정 정책이다. 올바르게는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⑤ O —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직접 확대하여 위축된 생산과 고용의 회복을 돕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오답 포인트

①~④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만 보고 경기 부양책으로 착각하기 쉽다. 각 수단이 시중 통화량이나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 문항에서 실제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⑤의 정부 지출 증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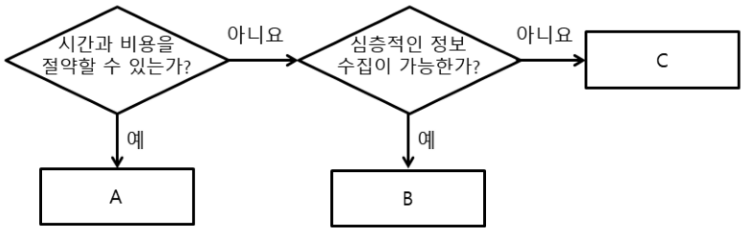
먼저 경기 침체인지 과열인지 판단한 뒤 정책이 총수요와 통화량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경기 침체에는 정부 지출 증가·세금 인하·국공채 매입·재할인율 인하·법정 지급준비율 인하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경기 침체에는 '정부는 더 쓰고 덜 걷고, 중앙은행은 돈을 더 푼다'로 정리한다.

NoteBase

9. 다음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을 상대적으로 비교·설명한 것이다. A~C는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분석 기준이 명확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쉽다.
② B는 관찰 결과를 수치화·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A와 C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④ C는 A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⑤ B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식의 첫 기준인 시간·비용 절약 여부와 두 번째 기준인 심층 정보 수집 여부를 차례로 적용하여 A는 질문지법, B는 참여 관찰법, C는 실험법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인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질문과 응답 범주를 사용하므로 분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통계 처리가 쉽다.
② O — B인 참여 관찰법은 현장에 참여하여 얻은 질적 자료가 중심이므로 관찰 결과를 수치화·계량화하기 어렵다.
③ X — 틀린 표현은 'A와 C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이다. A인 질문지법과 C인 실험법은 모두 표준화와 통제를 중시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방법은 B인 참여 관찰법이다.
④ O — C인 실험법은 인위적인 처치와 상황 통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A인 질문지법보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⑤ O — B인 참여 관찰법은 대상자의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적용하기 용이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참여 관찰법의 특성과 뒤바꾼 선지이다.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큼'은 비표준화된 질적 자료를 해석하는 참여 관찰법의 대표적 한계이며,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표준화·통제로 이를 줄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식의 분기 조건을 위에서부터 적용한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면 질문지법, 그렇지 않지만 심층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참여 관찰법, 둘 다 아니면 실험법으로 판단한 뒤 각 방법의 표준화·계량화·윤리 문제를 선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질문지법은 신속·표준화, 참여 관찰법은 심층·질적·주관 개입, 실험법은 통제·윤리 문제로 연결한다.

NoteBase

10.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병)의 국가 형성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자연 상태에서는 끝없는 생존투쟁 상태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확보하고자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
>
>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하여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
>
> (병)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중단되었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 보존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① (갑)은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② (병)은 (을)과 달리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는 개인들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갑)은 직접 민주주의, (병)은 간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④ (병)은 성악설에 기반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⑤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자연 상태, 권리의 양도 범위, 주권의 소재, 이상적 정치 형태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자기 보존을 위해 강력하고 불가분한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을) 로크: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이 있지만 그 보장이 불안정하므로,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한 정부를 구성한다고 본다.

(병) 루소: 사유 재산과 불평등으로 자연 상태의 평화가 깨졌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인민이 주권을 갖고 일반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 대비: 홉스는 절대적·불가분한 주권, 로크는 제한 정부와 저항권, 루소는 인민 주권과 일반 의지를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홉스는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을 필수로 보지 않고 주권이 분할될 수 없다고 보았다. 틀린 표현은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이며, 올바르게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강력하고 불가분한 주권을 필요로 보았다'이다.
② X — 루소는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제한적으로 국가에 맡긴다고 보지 않고, 각자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동의에 기초한 계약은 로크에게도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을)과 달리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국가에 양도'이며, 올바르게는 '루소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여 일반 의지에 따르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이다.
③ X — 홉스는 질서와 평화를 가장 잘 유지하는 형태로 군주정을 선호했고, 루소는 주권자인 인민이 일반 의지를 직접 형성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았다. 틀린 표현은 '(갑)은 직접 민주주의, (병)은 간접 민주주의'이며, 올바르게는 '홉스는 군주정을 선호하고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보았다'이다.
④ X — 루소는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고 자유롭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주권을 인민에게 두었으므로 국민을 통치 권력에 복종하기만 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성악설에 기반'과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이며, 올바르게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을 전제로 인민 주권과 일반 의지를 강조하였다'이다.
⑤ O — 홉스는 생명과 자기 보존, 로크는 생명·자유·재산,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현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세 사상가 모두 국가를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세 사상가가 모두 사회계약을 말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권리 양도의 범위와 주권의 소재를 서로 바꾸기 쉽다. 특히 ②는 로크의 제한적 권리 위임을 루소에게 붙였고, ③은 홉스와 루소가 선호한 정치 형태를 뒤바꾸었으며, ④는 홉스의 성악설을 루소에게 옮겨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인의 투쟁·절대 주권·군주정'이면 홉스, '생명·자유·재산·제한 정부·저항권'이면 로크, '자연적 선함·일반 의지·인민 주권·직접 민주주의'이면 루소로 판단한다. 그다음 선지에서 권리 양도의 범위와 주권의 소재가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절대 주권, 로크는 제한 정부, 루소는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이다.

11.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①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사회적 불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강조한다.

② ㉡은 수정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한국의 민법에서는 폐기된 원칙이다.

③ ㉢은 소유권이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의 절대적 권리이다.

④ ㉣에 따르면 계약의 주체가 무지한 약자일지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노예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은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근대 민법의 세 원칙과 현대 민법에서 이를 수정·보완한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법이 정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자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제한·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따라서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계약의 자유도 사회적 공정성을 해칠 수 없으며, 과실 책임의 일반 원칙과 함께 제조물 결함 등 법이 정한 영역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를 중시하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지, 계약의 사회적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원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 '㉠은 사회적 불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강조한다.' 올바른 표현: 사회적 불공정성을 통제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 X — ㉡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으로 기능한다. 틀린 표현: '수정 원칙으로 대체되어 폐기된 원칙이다.' 올바른 표현: 과실 책임의 원칙은 유지되면서 특정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X —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의 절대적 권리이다.' 올바른 표현: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④ X — ㉣ 계약 공정의 원칙은 자발적 의사만으로 계약의 정당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제한한다. 틀린 표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노예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바른 표현: 자발적으로 체결했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공정성에 반하는 노예계약은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O — ㉤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법이 정한 경우 행위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그 제조물을 이용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율적 의사'라는 말 때문에 맞아 보이지만, 선지의 결론인 '사회적 불공정성의 검토'는 ㉠이 아니라 ㉣의 내용이다. 또한 현대의 수정 원칙은 기존 원칙을 전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보완한다는 점을 놓치면 ②와 ③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근대 원칙과 현대의 수정 원칙을 짝지어 판단한다. 재산권은 '절대적 소유권 →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 계약은 '의사 자치 → 사회적 공정성 통제',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 → 법이 정한 경우 과실 없이도 책임'의 대응으로 구별한다. 수정 원칙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 원칙이 전면 폐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소유권은 공공복리로 제한되고, 계약 자유는 계약 공정으로 통제되며, 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NoteBase

12.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쓰레기는 대부분 바다로 유입되더라도 해양 생명체에 의해서 다시 생태계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쳐 순환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바다에 유입된 뒤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① ㉠,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③ ㉠, ㉣과 같은 현상은 ㉡, ㉢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은 ㉠, ㉣과 달리 특수성을 지닌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 ㉢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현상을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으로 구분하고, 각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고 가치 함축성, 개연성·확률성, 특수성을 지닌다.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몰가치성, 필연성·확실성, 보편성을 지니며 인과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ㄱ의 시민 단체 활동과 ㄹ의 법 마련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고, ㄴ의 생태계 환원 과정과 ㄷ의 플라스틱 분해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ㄹ은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틀린 표현인 '확실성의 원리'는 '개연성·확률성의 원리'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과 ㄷ은 자연 현상이므로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틀린 표현인 '당위 법칙'은 '존재 법칙'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과 ㄹ은 인간의 가치와 의지가 반영된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가치 함축적이다. 반면 ㄴ과 ㄷ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한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다.
④ X — ㄴ과 ㄷ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다. 특수성은 ㄱ과 ㄹ 같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므로, 'ㄴ, ㄷ과 같은 현상은 ㄱ, ㄹ과 달리 보편성을 지닌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인과 관계는 ㄱ과 ㄹ 같은 사회·문화 현상보다 ㄴ과 ㄷ 같은 자연 현상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ㄴ, ㄷ과 같은 현상은 ㄱ, ㄹ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법을 마련한다는 ㄹ의 표현 때문에 법칙과 혼동하기 쉽다. 여기서 법 마련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며, 자연 현상의 존재 법칙과는 다르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에는 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성·확률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간의 의지와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개입되면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고 가치 함축성·당위 법칙·개연성·특수성을 연결한다. 개입되지 않은 자연의 변화라면 자연 현상으로 보고 몰가치성·존재 법칙·필연성·보편성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당위·개연·특수, 자연 현상은 몰가치·존재·필연·보편이다.

NoteBase

13. 다음 밑줄 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국가 권력 간에 '독립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제도적 분리를 통해 각 기구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대통령은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포함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묻는다. 핵심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관여하는 권력 융합의 요소와 대통령제 자체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권력 융합 = 행정부와 입법부가 조직이나 권한 면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해임 건의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두고 있다.

핵심 구분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의 구성이나 활동에 관여하면 권력 융합의 요소이다. 반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라는 점은 대통령의 지위를 설명할 뿐,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을 뜻하지 않는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4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6조 제1항·제4항, 제86조 제2항과 국회법 제29조 제1항이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에 관여하는 권력 융합의 요소이다.

② O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다.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의 직책도 맡을 수 있으므로 조직상 권력 융합에 해당한다.

③ O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 구성원의 해임에 관여하므로 권력 융합의 요소이다.

④ X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라는 설명 자체는 옳지만, 이는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를 나타낼 뿐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을 보여 주지 않는다.
틀린 연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 →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
올바른 연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

⑤ O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결합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본다. 따라서 제시문의 권력 융합적 특성과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내용이 헌법상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 이 문항은 각 선지가 사실인지가 아니라 밑줄 친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또한 ⑤는 행정부 내부의 지휘 관계만 보지 않고,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제가 결합되었다는 제도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구성·활동에 관여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임시회 집회 요구,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해임 건의, 국무총리제는 융합 요소로 분류하고, 대통령의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지위는 대통령제 자체의 특징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융합 요소는 '임시회 요구·겸직·해임 건의·국무총리제'이고, 대통령의 두 지위는 대통령제 자체의 특징이다.

NoteBase

14.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쌀 (섬)	옷 (벌)
갑국	5	5
을국	4	2

① 갑국은 옷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을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갑국의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④ 을국의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⑤ 쌀 1섬의 교역조건은 옷 1벌에서 2벌 사이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나라의 최대 생산량을 비교하여 절대우위, 비교우위, 기회비용, 교역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같은 재화의 생산량을 나라별로 비교하여 절대우위를 판단한다.
2. 한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다른 재화의 최대 생산량으로 나누어 기회비용을 구한다.
3.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의 비교우위를 확인한다.
4. 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핵심 근거

갑국은 쌀 5섬 또는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고,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1섬이다. 을국은 쌀 4섬 또는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0.5벌이고,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따라서 을국은 쌀에, 갑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쌀 1섬당 교역되는 옷의 양은 상호 이익을 위해 옷 0.5벌보다 많고 1벌보다 적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의 옷 열에서 갑국은 5벌, 을국은 2벌을 생산하므로 갑국이 옷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O — 쌀 1섬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옷 1벌, 을국이 옷 0.5벌이다. 기회비용이 더 낮은 을국이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O — 갑국은 쌀 5섬과 옷 5벌을 서로 대체하여 생산하므로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④ O — 을국은 쌀 4섬과 옷 2벌을 서로 대체하여 생산하므로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⑤ X — '쌀 1섬의 교역조건은 옷 1벌에서 2벌 사이'라는 범위가 틀렸다.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을국에서 옷 0.5벌, 갑국에서 옷 1벌이므로,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조건은 쌀 1섬당 옷 0.5벌 초과 1벌 미만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쌀 1섬당 옷 몇 벌인가'와 '옷 1벌당 쌀 몇 섬인가'를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옷 1벌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쌀 1섬, 을국에서 쌀 2섬이지만, 문제의 교역조건은 쌀 1섬을 기준으로 하므로 옷 0.5벌과 1벌 사이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역조건의 기준 재화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양국에서 각각 구한다. 교역비율이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는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이 큰 쪽,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이며,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이다.

NoteBase

15. 다음은 계약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법에서는 사람들의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① ㉠과 관련하여 근대 민법의 계약 공정의 원칙이 수정되어 오늘날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② ㉡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③ ㉢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말한다.

④ ㉣에서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

⑤ ㉣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맺은 계약에 대해 미성년자 측은 취소권을 갖는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계약의 기본 원칙,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미성년자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없는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행위능력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다.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처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률상 제한되는 사람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대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했지만, 현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공정을 위해 그 원칙이 수정·제한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틀린 표현: '오늘날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올바른 표현: 오늘날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제한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② X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행위능력이다. ㄴ인 의사능력은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틀린 표현: 'ㄴ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올바른 표현: ㄴ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③ X
ㄷ은 행위능력이며,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뜻하는 것은 ㄴ인 의사능력이다.
틀린 표현: 'ㄷ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
올바른 표현: ㄷ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다.

④ O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 X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미성년자 측은 취소권을 갖는다'
올바른 표현: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⑤는 미성년자 보호의 원칙만 생각하면 고르기 쉽지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예외가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의사능력은 정신적 판단 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구별한다. 미성년자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원칙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면 단독 가능 →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 불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사는 판단, 행위는 단독 유효. 미성년자는 순수한 이익만 단독 가능, 속임수를 쓰면 취소 불가이다.

NoteBase

16. 국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가)~(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 국회는 임명에 대한 동의 및 선출을 통해 국가 주요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가)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사전적 동의권이다.

② (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갖는다.

③ (나)에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국회의 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⑤ (라)에서 임명 동의 대상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포함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조약 동의권, 법률안 제출권, 해임건의권 및 주요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국회의 권한이 동의·의결·건의·선출 중 어떤 형식인지와 그 법적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전적 동의권 =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비준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해임건의권 =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제안하는 권한으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해임명령은 아니다.

NoteBase

핵심 구분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안전보장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비준 전에 행사되는 사전적 통제 권한이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정치적 통제 수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임결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미리 통제하는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전적 동의권이다.

② X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을 헌법과 동등한 효력으로 올려놓지는 않는다.
- 틀린 표현: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
- 올바른 표현: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③ X
- 헌법상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법상 위원회도 그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틀린 표현: 5인 이상의 국회의원
- 올바른 표현: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X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건의에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틀린 표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 올바른 표현: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를 존중할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X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인 것은 아니며,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
- 틀린 표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임명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 올바른 표현: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헌법과 같은 효력'으로 바꾼 부분, ④의 정치적 건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임명령으로 바꾼 부분이 핵심 함정이다. ③은 법률안 제출 주체보다 '5인'이라는 숫자를 먼저 점검해야 하고, ⑤는 국회의 '동의'와 '선출'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의 권한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행위의 형식을 구분한다. 조약은 체결·비준에 대한 사전 동의, 국무위원은 비구속적인 해임건의, 주요 사법기관장은 임명동의,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로 판단한다. 숫자가 제시되면 의원의 의안 발의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사전 동의, 해임은 비구속적 건의,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 의원발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다.

NoteBase

17. A, B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 비행을 일삼는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
> B : 처음 비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변인의 따가운 시선과 평가로 인해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① A는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본다.

② A는 '일탈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있다고 본다.

③ B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객관적 기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④ B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핵심적 대책은 사회 규범의 강한 통제력 회복에 있다고 본다.

⑤ B는 A의 이론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의 반복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탈을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학습한다고 보는 차별 교제 이론과, 주변의 낙인 및 부정적 자아 형성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는 낙인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차별 교제 이론): 일탈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일탈을 정당화하는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학습하여 일탈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지속적 접촉·상호 작용·학습'이다.

B(낙인 이론): 사회가 특정인을 일탈자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낙인을 내면화하여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2차적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사회적 반응·낙인·부정적 자아·2차적 일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는 설명은 A가 아니라 B인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B가 주변의 부정적 반응과 낙인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본다.
② O — A인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학습하는 데서 찾는다.
③ X — '사회의 객관적 기준'에 주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B인 낙인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절대적 기준보다 특정 행동과 사람을 일탈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과 주관적 평가에 주목한다.
④ X — '사회 규범의 강한 통제력 회복'이 핵심 대책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B인 낙인 이론에서는 불필요한 낙인과 부정적 사회 반응을 줄여 낙인의 내면화와 2차적 일탈을 막는 것이 핵심 대책이다.
⑤ X — 'B는 A와 달리 거시적 관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와 B 모두 개인 간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이며, B는 낙인이 부정적 자아 형성과 반복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A와 B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A는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한 '일탈의 학습'을, B는 일탈 이후 주변의 '부정적 반응과 낙인'을 원인으로 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특히 ①의 '부정적 반응·2차적 일탈'은 B의 대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촉·상호 작용·가치관 내면화·학습'이 제시되면 차별 교제 이론으로, '주변의 평가·낙인·부정적 자아·2차적 일탈'이 제시되면 낙인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차별 교제는 일탈을 배우는 과정이고, 낙인은 일탈자로 규정된 뒤 2차적 일탈이 생기는 과정이다.

NoteBase

18. 다음 자료에 있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우리나라는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가)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 을: 선출직 지방 공직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나)이/가 있지.

① (가)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② (나)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③ (나)에 의해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주체·대상·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민투표제 =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찬반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 = 주민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 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가)는 국민투표제이고, (나)는 주민소환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5조는 주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정하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의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국민투표제는 국민이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국가의 중요 정책에 직접 의사를 표시하므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② O — (나)의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임기 중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므로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③ X —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국민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주민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다.'
④ O — (가)의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나)의 주민소환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법률 개정의 대상이다.
⑤ O — 국민투표와 주민소환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과 공직자 통제에 직접 참여하게 하므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국회의원'을 '지방의회의원'과 혼동하기 쉽다. 주민소환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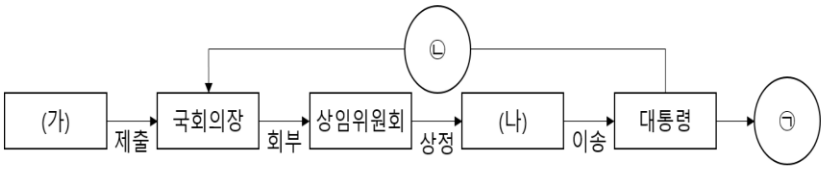
먼저 제도의 주체와 대상을 짝지어 판단한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중요 정책 등에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이고,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선지에 국회의원 소환이 나오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투표는 국가 정책, 주민소환은 지방 공직자이며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NoteBase

19.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는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송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 또는 ㉡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이루어지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의 경우에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제출부터 국회 의결, 대통령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법률의 효력 발생까지의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의 확정·공포와 효력 발생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공포 = 확정된 법률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대한민국헌법 제49조·제52조·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 일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의 공포와 즉시 효력 발생은 같은 뜻이 아니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법률안 제출 — (가)는 법률안 제출 주체이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해당한다.
2. 국회의장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한다.
3. 본회의 의결 — (나)는 국회 본회의이며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4. 정부 이송 —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한다.
5. 공포 또는 재의요구 — ㄱ은 공포, ㄴ은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요구이다.

왜 이 순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본회의 의결의 기초가 되고,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가)에는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

② O — (나)는 국회 본회의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O — ㄱ은 공포, ㄴ은 재의요구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X — '공포되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법률에 특별한 시행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⑤ O — ㄴ인 재의요구가 이루어지면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공포'와 '효력 발생'을 같은 시점으로 보는 데 있다. 공포는 법률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한다. 또한 일반 의결의 정족수와 재의결의 강화된 정족수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 제정 절차는 '국회의원·정부의 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 효력 발생' 순서로 판단한다. 숫자는 '이송 후 15일', '재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출은 국회의원·정부, 일반 의결은 과반·과반, 재의결은 과반 출석·3분의 2 찬성,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다.

NoteBase

20. (가), (나)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직장인 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
>
> (나) 극빈상황에 처한 67세의 을은 중위소득의 10%에 해당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① (가)의 제도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제도는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나)의 제도는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나)의 제도는 (가)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⑤ (가)와 (나)의 제도는 모두 공통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보험인 (가)와 공공부조인 (나)의 비용 부담, 가입 방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위험 발생 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상호 부조, 강제 가입, 사전 예방적 성격이 핵심이다.
공공부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가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 부담, 사후 처방적 성격, 강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핵심이다.
(가)는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이므로 사회보험이고, (나)는 빈곤층을 선별하여 정부가 지원하므로 공공부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내고 대비하므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틀린 표현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며, 올바르게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② O — (가)의 사회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공동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X — (나)의 공공부조는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원한다. 틀린 표현은 '강제 가입'이며, 올바르게는 '선별 지원'이다.
④ X — 공공부조인 (나)는 저소득층을 조세로 지원하므로 사회보험인 (가)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틀린 표현은 '약하다'이며, 올바르게는 '강하다'이다.
⑤ X — 사회보험인 (가)는 수혜자 등이 보험료를 분담하지만, 공공부조인 (나)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며, 올바르게는 '(가)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나)는 국가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실업 급여가 실업 이후에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①의 '사후 처방적'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은 급여 지급 시점이 아니라 위험 발생 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어 대비하는지로 판단한다. 또한 빈곤층을 선별하여 조세로 지원하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 납부, 강제 가입, 위험의 공동 분담이 보이면 사회보험으로 판단한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빈곤층 선별 지원과 국가 비용 부담이 보이면 공공부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상호 부조·사전 예방, 공공부조는 조세·선별 지원·사후 처방이다.

NoteBase